

# “지방소멸 위기 타개 특별지원책 필요”

### ‘인구감소 대책과 중앙 지방의 역할’ 특별 세미나… 이소영 실장 “국가 차원 ‘마스터 플랜’·특별법” 제안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3일 명지대 서울캠퍼스에서 ‘인구감소 대책과 중앙·지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이상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이동과 지역단위 인구변동’ 발표에서 지역 인구구조 변화의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역의 경제위축과 세수감소, 공

공기관 시설의 축소와 취업기회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 인구유출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인구유출 억제와 모든 세대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은 ‘인구감소시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 발표에서 “현재 국가차원의 인구정책은 출산·양육지원 정책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사전

에 인식하고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인구와 지역협력 종합전략 마련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과 인구위기지역의 특별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인구 및 지역협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행정부 하병필 지역발전정책관은 “그간 지역발전정책은 인구와 경제의 성장을 전제로 확대지방 개발정책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주민 삶의 질 제고에 관심을 갖는 질적 발전, 부처 간 통합적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 정책관은 “행자부는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혜수 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그로 인한 지역 공동화는 지방자치의 근간에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학계차원의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



두 차기 대권주자들의 따뜻한 행보  
참석해 어린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보훈자 없는 한자안심병원’인 서울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환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 왼쪽) 같은 날 안희정 충남지사는 서울 성북구 꿈의숲 아트센터 키즈카페에서 열린 ‘2040과 함께 하는 아이키우기 브런치토크’에

## “사병 급여, 최저임금의 50% 목표로 연차 인상”

###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국방력·한미동맹 강화는 대통령 기본 책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국가가 적극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을 것”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저임금의 50%를 목표로, 사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30%, 40%, 50% 등 연차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 북콘서트에 참석해 “국방력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서 우선은 사병의 급여를 높이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병 병장 급여가 올해 처음으로 20만원을 넘었는데도 최저임금의 15% 정도로서 국가가 노동력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국가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북한보다 몇십배 많은 국방비를 쓰는데 아직도 자주국방을 못하고, 전시작전권도 미국에 맡기고 있다”며 “우리 사병과 하사관들은 정말 잘하는데, 오히려 문제는 장군님들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에서 최신(장비와 무기를) 사도 제대로 활용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면서 “미국에 비하면 장군의 숫자가 많다. 장군님들만 제대로 해주면 최고의 강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거론하며 “개인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든 문화예술 행사 가운데 유일하게 성공해서 아시아 최고, 국제 5대 영화제로 성장한 행사(부산국제영화제)를 완전히 망쳤다”고 토로했다.

그는 “문화예술이 우리 인간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며 “문화예술은 국가가 적극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정책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도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지금처럼 경제 불평등이 심할 때 세계대공황이 발생했다. 2008년 금융위기도 이렇게 소득 격차가 벌어져 시작됐다”면서 “지금 한국 상황이 꼭 그렇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제는 말로만 민생경제가 아니라 실제로 민생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소비를 늘리고 내수도 살리지 않으면 더이상 우리 경제가 살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지역업자가 많은 나라”라며 “소상공인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대형 쇼핑몰이다. 그분들의 범위 내에는 대형 유통매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입점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

## “육아휴직 블랙기업, 정부지원 원천 배제”

### 안희정 충남도지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강화할 것”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5일 일반회사 기준 34.5%에 불과한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블랙기업 정부지원 배제’ 방침을 공약했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강북구 꿈의숲 아트센터 키즈카페에서 열린 ‘2040과 함께하는 아이키우기 브런치 토크’에서 “민간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육아휴직을 퇴사할 각오를 해야만 쓸 수 있다고 한다.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정비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지사는 특히 육아휴직 사용률과 함께 여성고용률도 지원대상 심사 기준으로 포함, 지원배제 대상 선정에 동종업계의 여성고용률 및 육아휴직 사용률을 비교 반영하기로 했다. 기업주들이 육아휴직 보장 부담을 이유로 여성고용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는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강화해 아동수준 기준 3.1%에 불과한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리고, 공공어린이집 이용률도 일단 30%까지 확대한 후 중장기적으로 50%까지 목표치를 잡기로 했다.

한편,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대연정론을 ‘배신’으로 규정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판에 대해 “개혁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 누가 대통령이 되는 의외와 협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뉴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5일 일반회사 기준 34.5%에 불과한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블랙기업 정부지원 배제’ 방침을 공약했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강북구 꿈의숲 아트센터 키즈카페에서 열린 ‘2040과 함께하는 아이키우기 브런치 토크’에서 “민간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육아휴직을 퇴사할 각오를 해야만 쓸 수 있다고 한다.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정비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지사는 특히 육아휴직 사용률과 함께 여성고용률도 지원대상 심사 기준으로 포함, 지원배제 대상 선정에 동종업계의 여성고용률 및 육아휴직 사용률을 비교 반영하기로 했다. 기업주들이 육아휴직 보장 부담을 이유로 여성고용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는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강화해 아동수준 기준 3.1%에 불과한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리고, 공공어린이집 이용률도 일단 30%까지 확대한 후 중장기적으로 50%까지 목표치를 잡기로 했다.

한편,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대연정론을 ‘배신’으로 규정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판에 대해 “개혁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 누가 대통령이 되는 의외와 협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뉴스

## 고민정 KBS 전 아나운서, 문재인 캠프 합류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가 지난 4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에 합류했다.

고 전 아나운서는 이날 오후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열리는 문 전 대표의 북 콘서트 행사장에서 전격 지지를 밝힌 뒤 콘서트 사회를 시작으로 문 전

대표를 도와나갈 계획이다.

고 전 아나운서는 최근 K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KBS 공채 30기로 ‘스펀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난치병을 앓는 남편 조기영 시인과 순애 보로도 유명하다.

KBS새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했던 고민정 전 아나운서는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 서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문 전 대표를 돕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 국주영은, 우수조례 ‘우수상’

### ‘교육정보화 지원·역기능 예방 조례’로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4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한 제13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수조례 심사를 통해 국주영은 의원이 입법 발의한 ‘전북초·중·고교형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인부문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이 조례는 초고속 인터넷 등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게임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유해매체 차단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기술적 안전조치관련 프로그램 구매 시 객관적 정량평가를 규정함으로써 지능적으로 진화해가는 유해사이트를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능강화를 의무화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전북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도의회 문건위, 장애인등계체전 전북 선수단 격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3일 제14회 전국장애인등계체육대회 결단식에 참석해 전북 선수단을 격려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땀 흘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선수들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체육회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건위 한완수 위원장은 “여러분의 땀과 노력은 물론 좌절과 고통의 순간까지, 그동안의 시간들은 값진 거름이 돼서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며 “선수단 각자가 전북 대표라는 자부심과 긍지로 누구보다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제14회 전국장애인등계체육대회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강원도 및 경기도, 서울 일원에서 열리며, 전북에서는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빙상, 아이스슬레지하기, 휠체어컬링 등의 종목에 20명의 선수가 종합 9위를 목표로 출전한다. /인재용 기자

## 문재인 지지를 32%... 안희정 10% 황교안 9%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문 전 대표를 뽑은 응답자가 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각각 10%와 9%의 지지율로 뒤를 이었다.

같은 방식으로 질문한 1월 4~5일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문 전 대표는 3%포인트 올랐다. 안 지사와 황 대행은 각각 7%포인트, 6%포인트 상승해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컸다. /뉴스

## ‘우병우 아들 특혜 의혹’ 백승석 경위 특검 출석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을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선발한 백승석 경위(65·시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에서 5일 출석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백 경위는 기자들을 피해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백 경위는 지난 2일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은 이날 백 경위를 상대로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선발된 경위에 대해 다시 추궁했다.

2015년 2월 입대한 우 전 수석의 아들은 같은 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두 달 뒤인 7월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당시 우 전 수석의 아들은 이상철 서울청 경비부장(경무관) 차관 운전임무를 맡았다. 이후 2015년 12월 이 부장이 서울경찰청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하자 우 전 수석의 아들도 차장실 소속으로 변경됐다.

이러한 보직 변경은 부대 전일 4개월 이후 가능하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함께 우 전 수석의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백 경위는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우 수석 아들의 운전실력이 남달라서 뽑았다. 특히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특검팀은 같은 시간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소환해 국정문건 유출 등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이날 오후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경숙(62·구속)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성형외과 김영재(57) 원장의 부인 박재운(48)씨 등 구속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뉴스

## “靑 압수수색 임의제출 수용 검토”

### 특검, “영장에 박 대통령 피의자 적시 헌법 위반 아냐” 6일까지 황교안 권한대행 답변이 오지 않으면 후속조치”

박영수 특별검사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임의제출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규택 특검보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임의제출 관련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금요일 오후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6일까지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청와대측의 지적에 대해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뿐만 아니라 다수인물이다”라며 “수사에 필요한 장소와 자료를 모두 고려했다면 대부분의 청와대 장소와 물건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을텐데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위헌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특검보는 “이미 검찰 특별부사본부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

해서 기소를 한 상태”라며 “소추금지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경내진입을 승인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응이 관련 법령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돼, 사실상 특검의 협조요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압수수색과 별도로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월 둘째주 중 대면조사를 실시한다는 데 박 대통령 측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